“이번주 복귀 안 하면 전문의 1년 지연될 것”의료계의 정부 자료 공개엔 “재판 방해하려는 것”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는 “이번주 중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수련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이뤄지기 전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진료비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들이 경영 위기를 겪을 때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정부는 오는 7월부터 3달 동안 의료기관이 지난해 같은 달 받았던 급여 총액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동안 의료 수입이 급감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 노력을 했으며 △중증환자 입원·외래 진료 규모를 유지하는 기관이다.이어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밀릴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 기간을 다 채우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한 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취득은 1년 미뤄진다. 박 차관은 “다음주인 5월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에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업무개시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번주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정부 쪽 제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상대방(전공의 등)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하였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말했다.법원이 이 재판에서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하면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렇지(집행정지 인용 판결) 않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정부는 즉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밝혔다.